

사 랑 사 랑

회원통신 제56호(99/8/24)

인 권 운 동 사 랑 방 「SARANGBANG」 Group for Human Rights, Korea

(110-522) 서울 종로구 명륜2가 8-29 4층

대표전화: 741-5363, 팩스: 741-5364 통신ID: rights(천리안, 하이텔) 인권사랑(나우누리)

E-mail; rights@chollian.net Internet Web; <http://www.iworld.net/~rights>



TOKYO

역사가 멈춘 민족: 재일 조선인

朝鮮籍

재외동포법안 철회를 촉구하는 사진전

일시 : 9월 내내

장소 : 살마시오소라 (안국동 쪽으로 들어가는 인사동 입구 전화 : 734-4388)

주관 : 지구촌동포청년연대(KIN, Korean International Network 전화 : 708-4327)

에바다 정상화, 멀고 먼 길

- 연대회의, 농성 1천일 사업 마무리 -

지난 8월 19일로 에바다 농아원생들이 '에바다 비리재단 척결과 정상화'를 요구하며 농성투쟁을 전개한 지 1천일을 맞았습니다. 96년 11월 27일 새벽에 당시 김영삼 대통령에게 공개서한을 보내면서 시작된 농성이 당사자인 농아원생, 교사, 학부모와 지역시민사회단체들의 공동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1천일이 넘도록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7월 에바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온 대학생연대회의(의장 김형수)가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전개하면서 서울의 인권단체들에게 에바다 문제 해결을 위해 힘써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우리 단체를 비롯한 33개 단체들이 모여 '에바다 정상화를 위한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를 구성하고, 우선 눈앞에 닥친 1천일을 기념하는 사업들을 전개하기로 하고 그간 준비에 박차를 가해왔습니다.

그런 결과로 8월 18일에는 '에바다 문제 해결을 위한 대토론회; 에바다, 이렇게 운영하자'가 열렸고, 19일에는 1차 대표자회의와 기자회견, 서울시민견기대회 및 문화행사가 열렸고, 20일에는 평택역에서 문화행사를 가졌습니다. 자세한 행사 내용은 이미 <인권하루소식>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따로 소개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번 연대회의의 행사는 평택지역에 고립되어 있던 에바다 문제를 서울로 끌어올렸으며, 이후 서울에서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단위를 구성했다는 것이 가장 큰 의의 일 것입니다. 아울러 서울 시민들에게 에바다가 아직도 정상화되지 못하였음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도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드디어 연대회의를 통해 에바다 문제는 서울에 입성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행사를 애를 써서 치러냈지만, 앞으로 갈 길은 험난합니다. 에바다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재단 이사회의 정관을 이사장인 이성재 의원이 실질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바꾸고, 구 재단측 인사들을 척결해야 합니다. 해직되거나 징계에 처해졌던 교사와 노조원들의 원상회복과 제도적으로 시설의 안정화를 이를 방안을 정착시켜야 합니다. 이하지만, 이런 일들이 구재단측 이사들의 방해로 인해서 늘 벽에 막히고는 합니다. 여기에는 사회복지사업법이 갖는 한계 때문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에바다 구재단측의 배후에는 평택시장이 있고, 평택시는 구재단측과 비리로 유착된 공범관계에 있는 관계로 문제의 해결이 더 힘듭니다. 이 평택시장을 자민련이 중앙당 차원에서 비호하고 있는 점 때문에 정상화는 쉽지 않습니다.

이에 연대회의는 △ 에바다 구재단인 최실자 일가의 완전한 축출 △ 재단의 비리, 인권유린에 항거했던 이들의 원상회복 및 명예회복 △ 민주적이고 투명한 시설 운영의 모범 사례 창출 △ 제반 법적·제도적 개선을 통한 시설 내의 비리와 인권유린의 근절을 목표로 내걸고 이후 이를 이루기 위해 조직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올 하반기 정기국회 기간 중에는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 연대회의는 노력을 집중할 생각입니다. 농아원생들의 투쟁이 3년을 넘기도록 둘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방은 연대회의의 간사단체를 맡고 있으며, 사무국장이 결합하고 있습니다.)

에바다 정상화를 촉구한다

우리는 에바다 비리재단 퇴진과 정상화를 위한 에바다 농아학생들의 농성 1천 일째를 맞으며 슬픔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장애인 수용시설의 일상화된 비리로 인한 장애인의 인권은 말로 표현하기조차 어려운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그동안 형제 복지원, 성지원, 효정원, 수심원, 에바다 등 수많은 비리와 인권침해 사례들이 한 번도 해결되지 않고 반복되었다.

김대중 대통령은 장애인을 위한 정책을 힘주어 말해왔고 국제 인권상까지 수상했다. 나아가 김대통령은 에바다 비리사태를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세 차례나 했고, 특히 98년 5월 10일 제2차 국민과의 대화에서 “이번에는 꼭 해결해 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한 지가 1년 3개월을 넘었다.

강제노역, 임금착취, 인신매매, 사망, 실종, 변사체 발견, 국고 보조금과 후원금 횡령 등으로 어린 농아가 배가 고파 개밥그릇의 라면을 주워먹는 일마저 생겨난 에바다 비리재단 최씨일가, 이들과 결탁한 일부 공무원들, 그리고 비리재단을 비호하는 데만 급급한 김선기 평택시장, 수사 감사에서 명확한 증거조차 고의적으로 누락시켜서 최실자 전원장의 개인비리로 몰고 갔던 사법·행정기관들을 볼 때 에바다 사태는 철저한 지역 토착비리의 전형이다.

다시는 이 땅에 장애인을 치부의 대상으로 돈벌이의 대상으로 삼아 더러운 배를 불리는 에바다 비리 재단의 최씨일가와 같은 인간들이 없어져야 한다. 이들에게 발목이 잡혀 비리재단을 비호하는 김선기 평택시장과 일부 썩어빠진 공무원들은 더더욱 용서할 수 없다. 우리는 말도 못하고 듣도 못하는 농아원생들의 고귀한 투쟁을 헛되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다. 이제 에바다 투쟁은 장애인 시설을 비롯한 사회복지시설을 민주화시키는 투쟁의 한 가운데에 우뚝 서 있다. 우리는 에바다를 상식이 통하는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과, 농아학생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라는 곳으로 만듭으로써 우리 사회에 만연한 시설 비리와 시설 내 인권유린을 근절하는데 큰 걸음을 떼어놓고야 말 것이다.

우리의 요구

1. 김대중 대통령은 즉각 에바다 사태해결 약속을 지켜라.
2. 이성재 의원은 에바다 복지회의 대표이사로서 정상화를 위한 단안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3. 자민련은 김선기 비호를 중단하라.
4. 김선기 평택시장은 이제라도 구 재단측 이사를 즉각 해임하라.
5. 정부는 에바다 사태를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사태해결에 나서라.

우리는 사태해결을 위해 법적, 정치적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시설 내의 비리를 발생하게 하고, 비리를 척결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회복지사업법 등의 관련법 개정운동을 전개할 것임을 밝힌다.

1999년 8월 19일

에바다 정상화를 위한 연대회의(33개 시민사회단체)와 17개 시민사회단체

사 / 업 / 보 / 고

(99년 7월 넷째 주부터 8월 셋째 주까지)

인권캠프 성공리에 마쳐

사랑방 인권교육 특성 큰 호응

인권교육실에서 처음으로 시도한 3개의 인권캠프가 모두 성공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대학생 캠프(7월 27-29일/ 서울대), 어린이 캠프(8월 9-10일/ 두밀리수련원), 청소년 캠프(8월 12-14일/ 두밀리수련원) 등 연령대로 나눠 열린 이번 캠프에 대해 전반적으로 성공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달 정도의 짧은 준비기간에 이루어진 다소 무리한 기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참가자들의 호응이 매우 높았으며, 특히 강연중심이 아니라 '참가자들이 직접 참여해 만들어나가는 교육'이라는 사랑방 인권교육의 특성이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음을 증명해 기획였습니다. 또한 이번 캠프는 과거 수동적인 교육방식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교육대상을 찾아나섰다는 점에서 교육실에 큰 전환점을 가져다 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3개 캠프의 준비과정과 교육내용에 대한 공통된 평가는 △준비기간이 부족해 충분한 논의와 모의 시뮬레이션을 통한 프로그램 보완이 미흡했다는 점 △특히 어린이·청소년 캠프 모둠교사들에 대한 사전교육이 미흡했다는 점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 충분한 논의와 참가자들의 고른 참여, 경험에 대한 공유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다는 점 △프로그램의 구체화와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점 등입니다.

니다.

이러한 평가에 따라 교육실 내부에서는 인권캠프를 정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얻었으며, 참여중심적 교육 프로그램의 지속적 개발에 힘쓸 예정입니다.

또한 인권캠프에 모둠교사(보조교사)로 참여했던 대학생 7명이 앞으로도 '교재개발팀'으로 결합, 『인권교육길잡이』에 이은 제2의 인권교재 발간을 함께 준비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런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대학생 캠프를 제외하고는 모두 인원이 절반밖에 차지 않아서 재정적으로는 적자를 보아야 했습니다. 6월말에 터진 씨랜드 화재사건이나 폭우 등은 마지막까지 캠프의 성사 여부를 불안하게 했던 요인들로 작용했습니다.

MT 갖고 상반기 사업 평가

지난 21, 22일 사무국은 MT를 갖고 상반기 사업 평가와 하반기 사업계획을 공유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자유권위원회와 사회권위원회 및 기획회의의 신설, 재정에 대한 공동책임제, 인권영화제의 사랑방 내부 흡수, 대표 사무실 비상근 체계 등의 변화 가운데 지냈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인권운동의 대의에 충실한 연대사업의 강화(국가인권기구 공대위 등) △인권교재 출간과 인권캠프 성사 등 인권교육의 일정한 가시적인 성과 △사회권 보고서 작업을 통한 운동적 기반 형성 △상임활동가의 대거 충원으로 인한 인적 자원의 훈련 △시민사회운동내의 위상 제고 등의 긍정적인 성과가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반면에 여전히 극복되지 못한 부정적인

모습으로 △실천에 옮기지 못한 정책자문위원회와 후원회의 신설 계획 △상임활동가가 대폭 충원되었음에도 여전히 나타나는 업무의 과부하와 비효율성 문제 △인권정세에 발빠르게 적응하는 기획 능력의 부재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정기국회에서 인권관련법-인권법, 국가보안법, 행형법, 형사소송법 등이 대거 제·개정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역량 집중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보고서 작업을 끝내는 사회권 사업도 사회권을 운동으로 연결하는 전략의 개발이 시급하며, 4회 인권영화제의 성공적인 시행도 주요사업입니다. 또한, 국가인권기구의 민간측 파트너로서의 위상을 갖는 인권운동의 새로운 연대기구를 만드는 일도 과제입니다. 이와 이와 함께 일상 사업 단위인 하루소식, 자료실, 교육실 등 각 실들의 안정적인 사업추진도 과제로 제기되었습니다.

사무국 인원 재배치, 의사결정구조 변경

이처럼 하반기에도 어느 것 하나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이에 따라 명확한 계획과 정확한 사업집행이 요구됩니다. 사무국 MT에서는 이런 요구에 따라 사무국 인원 재배치를 결의했고, 의사결정구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의사결정구조로는 지금까지 주요 사업에 대한 토론과 공유의 장이었던 월례회의(대표를 비롯한 모든 성원)를 월단위 기조와 정책 결정단위로 세우고, 사무국 전체 회의를 실천사업 점검단위로 바꾸었습니다. 기획회의(대표, 사무국장, 편집실장, 교육실장, 총무)는 재정, 기획, 연대사업에 대한 시급한 결정들을 처리하는 단위로 만들었습니다. 또, 사무국 성원들 중 일상사업 단위에 배치된 인원들도 자유권, 사회권위원회의의 논

의에 참가시켜서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공유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와 같은 결정은 오는 9월 6일부터 시행됩니다.

변경된 사무국의 부서별 배치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표는 자유권위원장을 겸임하며, 최은아씨는 1개월 휴직 후 영화제, 사회권위원회에 결함합니다.

사무국장: 박래군(하루소식 편집장, 사회권위원장 겸임)/편집실장: 염규홍/총무: 이창조(하루소식 겸임)/하루소식: 박래군, 이창조, 유해정, 김보영/자료실: 류은숙(교육실장 겸임), 엄주현(권태평 어머니와 김수경 보조 결함)/교육실: 류은숙, 배경내(국가인권기구 공대위 간사 겸임)/인권영화제: 김정아, 최은아/자유권위원회: 김정희(국가보안법), 고근예(행형, 보안관찰법), 유점열/사회권위원회: 이주영, 최은아

이상과 같은 부서 변동과 의사결정구조의 변동을 통해 하반기 복잡하고 힘든 정세를 뚫어나가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과 애정을 당부드립니다.

다시 벽 앞에 선 국가인권기구

8월 14일 폐회된 임시국회에서도 인권법이 처리되지 않음에 따라 인권법은 정기국회에서 다루어질 예정입니다.

공대위는 최근 김성재 민정수석, 임채정 국민회의 정책위의장 등과의 면담을 통해 인권위를 국가기구로 설치하고 시급히 인권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청와대와 국민회의는 민간단체의 주장을 최대한 수용하여 국가기구로 설치할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소속없는 국가기구'로 인권위를 설치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을 유포하며 인

권위를 국가기구로 설치하려는 흐름에 저항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청와대 김종권 비서실장, 김성재 민정수석, 임채정 정책위의장, 김정환 법무부차관 이상 4인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로부터의 독립 △업무의 독립 △재정의 독립 △인자의 독립이라는 4대 원칙에 따라 인권위를 설치한다는 것과 인권위원을 민간인으로 한다는 원칙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부로부터의 독립”이라는 원칙이 곧 국가기구를 의미한다고는 단언하기 힘든 상황이며, 또한 인권위원을 민간인으로 할 경우 인권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독립적인 예산권 확보가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공대위는 대표자회의를 거쳐 ‘국가기구’로 인권위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인권위원회에 공무원 신분을 부여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기국회 대비 정치권 로비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했습니다.

국가보안법, 7조 삭제에 집중

새 연대기구 곧 출범

김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국가보안법의 개정을 천명한 이후 사랑방은 ‘새로운 국가보안법운동 연대기구’ 구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표가 시민사회단체의 주요 인물들을 계속 접촉하면서 이에 대한 제안을 하고 있으며, 이런 결과는 조만간 연대기구 구성으로 가시화될 것입니다.

기존에 전국연합을 중심으로 한 ‘국가보안법 철폐 행동연대’가 있고, 국가보안법 국제캠페인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연대기구를 구성하는 이유는 이번 개정국면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7조 삭제에 있고, 이에 찬성하는 모든 시민사회단체들을 포괄할 필요

가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연대기구의 원칙으로 ① “국가보안법 7조 삭제”가 연대에 소속되기 위한 최 하한조건이다.

② 각 단체는 “국가보안법 7조 삭제”를 주장하는 한 언제든지 자유롭게 입장을 표명할 수 있다. ③ 연대기구 공동사업은 집행위원회에서의 철저한 조율과 전원일치로 결정한다. ④ 연대기구 입장표명은 역시 의사결정단위의 전원일치를 원칙으로 하고 되도록 낮은 수위에 맞춘다. ⑤ 연대기구는 일단 정기국회가 끝나는 시점에서 해산한다 등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① 일상사업 (시의에 따라 입장표명 /정계·언론계 로비 /자료수집·공유 /캠페인 /법안 연구 등) ② 홍보사업 (국가보안법 신문 발간, 홍보책자 발간) ③ 법학자, 법조인 등 설문조사 ④ 가을에 두 번 정도의 집중 캠페인 등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대기구가 위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 철폐론자와 개정론자가 현 시기 국가보안법 개정 정세에 대한 입장을 조율하는 것이 큰 문제인데, 아무리 전원일치제 의사결정을 강조한다고 해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대두될 것이 예상됩니다.

한편, 국가보안법 캠페인팀은 8월말 신문을 발행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국가보안법 신문은 △국가보안법 반대운동에 대한 공감대를 광범위하게 형성 △정치권 및 언론계에 대하여 국가보안법 개폐의 당위성을 설득하기 위한 수단 등의 목적으로 구상되었습니다. 격주로 타블로이드판 4면과 8면을 내게 되며, 사랑방 등 5개 단체 실무자들로 편집진을 구성하여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후 연대기구가 발족하면, 신문을 이전시킬 예정입니다.

□ 인권영화제가 오는 10월말로 다가왔고, 일부 구체적인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장소를 확보하지 못해 불안한 상황입니다. 매년 상영장 확보 때문에 애를 먹어왔던 상황이 올해에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 올 봄 개정된 영화진흥법은 영화진흥위에서 추천하는 영화제에 대해 등급 심의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권영화제가 심의면제신청을 해야 할지 말지가 선택되어야 할 시급한 사항이지만, 이에 대한 최종 결론은 내리지 못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올해 인권영화제에서는 인권교육적 내용을 강화하고, 시민들이 직접 찍은 비디오를 공모하고, 외국 영화제와 보다 긴밀한 연대를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올해 영화제는 사랑방이 직접 주최하는 것이고, 함께 출발했던 영화제들이 점차 관심을 잃어가는 상황에서 앞으로의 진로를 탐색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지점에 도달해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 서대표 1심 선고공판이 오는 9월 7일 오전 9시 30분, 서부지원 407호 법정에서 열립니다. 서부지원 형사단독 3부(판사 오석준) 지난 13일 오후4시 서부지원 10층 시청각실에서 <레드 헌트> 검증작업을 마쳤습니다. 이 자리에서 판사가 “이거 이적표현물이네, 이런 걸 상영했던 말야.”라는 반응을 보였다는 후문이 있는 상황으로 무죄 판결은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 자유권 위원회는 감옥을 생각하는 모임을 꾸준히 가지면서 감옥 지침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옥 모임은 내년 상반기에 지침서를 낸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보안관찰 사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 사회권위원회는 보고서 작업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사회권위원회는 완성된 분야부터 감수자를 선정하여 감수에 들어가고 있으며, 오는 9월초 원고를 정리하여 출판사에 넘기게 됩니다. 하지만, 9월중으로 갖기로 했던 심포지엄은 취소하고 대신 주요한 사회권 분야에 대한 관련단체와 전문가를 초청하여 매월 월례포럼을 가져갈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권운동의 방향들을 모색하게 됩니다.

한편, 아셈 민간단체 포럼에 인권분과 간사단체 역할을 맡으면서 인권분과 모임을 7월과 8월 각 한 차례씩 가졌습니다. 아셈민간단체포럼은 오는 9월 30일 정식 출범하게 됩니다.

□ 사무국은 7월부터 1주일씩 돌아가면서 휴가를 쓰고 있습니다. 일이 바쁜 부서는 휴가를 연기한 채 일에 몰두하기도 했습니다. 사무국장은 건강상의 문제로 7월 31일부터 8월 11일까지 장기 휴가 겸 재택근무를 갖고, 12일 복귀했습니다.

□ 휴직중인 이창조씨가 오는 8월 30일부터 9월 4일까지 홍콩에서 아시아인권위원회 초청으로 어필 담당자 연수를 받습니다. 교육실의 배경내씨는 3주간 동안 태국 방콕에서 인권활동가 교육을 받게 됩니다. 배씨는 교육이 끝난 뒤 난민촌과 아시아 주요단체들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 그동안 임신으로 인한 휴가를 가졌던 엄주현씨가 9월부터 정상 근무하게 됩니다. 출산 휴가 중인 김수경씨는 보육 문제로 인해 올해 안 정상 근무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편 사회권위원회에서 자원활동을 했던 김보영씨가 새로 연수를 받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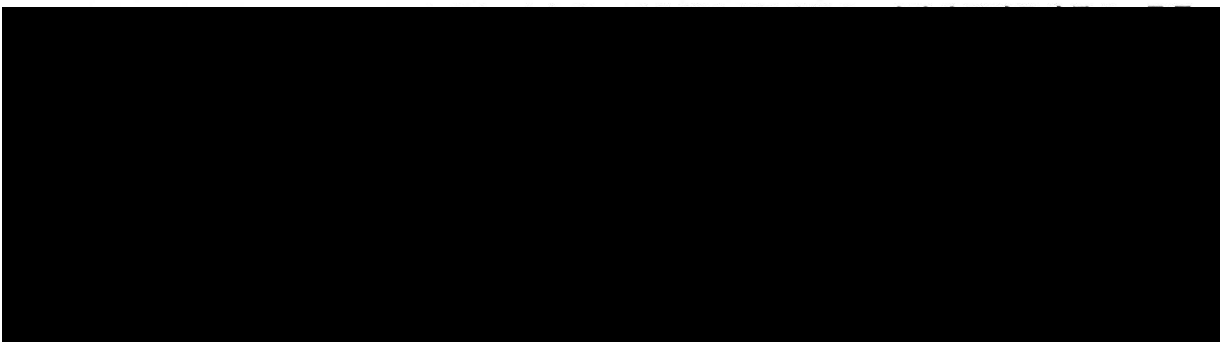
99년 7월 재정보고

(99년 7월 16일 - 8월 15일)

전기이월: - 14,276,385 원

수 입		지 출	
회비	1,867,800	공과금	101,510
후원금	2,405,901	복사·제본비	212,250
사업수익	5,575,420	사무기기 수리·유지비	175,000
인권하루소식	2,875,800	사무비품비	50,400
구독료	2,819,100	식비	414,910
인권시평 배급	56,700	우편·발송비	484,140
인권교육실	2,244,000	인권캠프	2,743,240
교육활동	290,000	자료구입비(간행물 포함)	41,000
인권교육길잡이 판매	65,000	잡비	84,460
아이들의 인권 판매	14,000	전화·통신비	1,359,170
인권캠프	1,875,000	집세	800,000
인권정보자료실	168,820	출장비	91,200
자료복사	152,820	활동비	4,320,000
국가보안법보고서 판매	16,000	기타	39,800
강연	286,800		
기타	11,760		
수입총액:	9,840,881원	지출총액:	10,917,080원
최종결산:		- 15,352,584원	

<7월 운영·자문위원 회비> (가나다 순)



* 아침 저녁으로 제법 천기운이 느껴집니다. 올 여름처럼 정말 힘든 더위는 처음이었지만 멀리서 저희들을 지켜봐주시고 챙겨주시는 분들이 있어 견뎌낸것 같습니다. 시원한 가을 바람에 저희들의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구좌 안내>



지 로: 7618848

예금주: 서준식